인문학 평가, 어떻게 할 것인가

| 박찬길 |

대학평가제도: 아무리 분개해도 변화되지 않는 이유

대학이 예전 같지 않다는 건 새삼스러운 얘기가 아니다. 대학도 특정한 역사적 조건에서 작동하는 사회적 기관인 만큼 시대적 조건에 따라 변화하는 것 자체가 이상한 일은 아니다. 하지만 최근 20년간 우리 대학에서 일어난 변화는 고등교육의 이념을 근본적으로 위협하는 수준에 이르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러한 변화의 위험성을 감지한 국내외의 수많은 학자들이 대학의 위기와 고등교육의 종말을 증언하며 항의해왔다.[1] 이러한 변화의 핵심에는 모두 다 알다시피 대학의 기업화와 그에 따르는 경쟁의 강화가 자리잡고 있다. 대학을 기업처럼 운영하면서, 교수들에게 더 많은 연구업적과 연구비 수주를 요구하는 것이 이제는 너무나 당연하게 받아들여지고 있다. 그리고 강화된

朴贊吉 이화여대 영문학과. 최근 논문으로 「낭만적 엘레지와 애도의 정치학: 셸리의 『애도네이즈』 읽기」(2014)가 있다.

1) Ellen Schrecker, *The Lost Soul of Higher Education: Corporatization, the Assault on Academic Freedom, and the End of the America University* (New York: The New Press, 2010); Frank Donoghue, *The Last Professors: the Corporate University and the Fate of the Humanities* (New York: Fordham UP, 2008). 한국의 자료로는 서보명 『대학의 몰락』(동연, 2011) 참조.

경쟁체제를 추동하는 것은 갈수록 견고해지는 대학평가제도다. 대학평가제도는 이제 어떤 특정 평가기관이 특정한 대학을 평가하는 수준을 넘어서서 모든 지역의 모든 대학을 대상으로 그 영역을 전면화하고 있으며, 대학은 교수를, 교육당국은 대학을, 국제적인 평가기관들은 나라를 평가하는 방식으로 서로 연관되며 범세계적인 네트워크로 발전하고 있다.[2] 현재 우리나라만 해도 주요 대학들은 이른바 4대 세계대학평가의 대상이 되어 있고,[3] 그러한 세계대학평가의 압력은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 각 대학의 교무처를 통해 개별 교수들에 대한 연구업적 평가라는 미시적인 영역으로까지 확대되어 강력하게 작동하고 있다. 따라서 이제는 어떤 개인이 또는 어떤 대학이나 어떤 나라의 교육당국이 이러한 대학평가제도에 어떤 불만을 제기한다고 해도 당장 큰 변화가 생길 것 같지 않다.

대학평가제도의 전면화는 모든 영역에 다 영향을 끼쳤지만, 전통적으로 대학교육의 핵심으로 여겨져왔던 인문학 분야에 훨씬 더 파괴적으로 작용하고 있다. 사실 인문학은 서양의 중세 대학에서부터 대학의 가장 핵심적인 교육과정이었고, 근대 대학의 모델이라는 19세기초 독일의 훔볼트(Humboldt)대학의 프로그램에서도 가장 중심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었다.[4] 낭만주의적 자아의 완성, 즉 한 인격의 도야와 완성은 훔볼트대학이 표방한 근대적 대학교육의 핵심이었고, 이를

---

2) Shin Jung Cheol and Robert K. Toutkoushian, "The Past, Present, and Future of University Rankings," *University Rankings: Theoretical Basis, Methodology, and Impacts on Global Higher Education*, ed. Jung Cheol Shin, Robert K. Toutkoushian, and Ulrich Teichler (New York: Springer, 2011) 1~16면 참조.

3) 한국연구재단 성과분석팀 『2013 세계대학평가 보고서』(대전: 한국연구재단). http://www.nrf.re.kr/nrf_tot_cms/board/notice/view.jsp?show_no=205&c_now_tab=0&check_no=176&c_relation=bizmenu&c_relation2=41&c_relation3=0&c_relation4=0&page=1&NTS_NO=46590.

4) Rosalind Pritchard, "Humboldtian Values in a Changing World: Staff and Students in German Universities," *Oxford Review of Education* 30.4 (Dec. 2004) 509~28면 참조.

실현하기 위해 대학이 새롭게 추구해야 할 고등교육의 원칙을 새롭게 만들어내기도 했다.[5] 하지만 따지고 보면 인문학을 중심으로 한 이러한 대학교육의 이상은 오랫동안 현실로 실현되었다기보다는 19세기 독일에서 잠깐 꽃피웠을 뿐, 현재에 이르기까지 거의 200년 동안 좀더 실용적인 교육을 원하는 세력으로부터 지속적인 공격을 받아왔다고 할 수 있다.[6] 그러나 최근 20년간 정착된 대학평가제도가 인문학에 끼친 해독은 지난 200년간 인문학에 가해진 공격의 해악을 훨씬 뛰어넘을 만큼 본질적이고 치명적이다. 인문학에 대한 과거의 비판은 대부분 그 비실용성에 대한 공격이었다. 그러나 최근의 평가제도는 인문학 종사자들이 인문학 고유의 연구목적과 의제설정, 인문학의 방법론적 전통을 자발적으로 폐기하도록 유도한다는 데 그 특징이 있다.

가령 훔볼트의 생각대로, 인문학 프로그램의 존재의의가 한 나라의 부흥을 이끌어갈 완성된 인격체를 형성하는 것이라고 하자. 이를 위해서 대학의 프로그램은 어떤 실용적인 지식을 주입하기보다는 기본적인 소양을 키워내기 위해 철학, 역사, 문학의 고전을 읽는다. 현재에도 일각에서는 기초교양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긴 하지만, 교수평가의 중요한 일부로서 도입된 강의평가제도는 눈에 보이지 않는 인격체의 완성을 교육의 성과로 측정하지 못한다. 교육의 효과는 오로지 학생들이 평가하는 '소비자만족도'로 수치화될 뿐이다. 또 학생들은 실용적인 능력의 증진과 수치화된 공인점수, 그리고 학위라는 자격증을 원할 뿐, '인격체의 완성'을 요구하지 않는다. 이러한 상황에서 여전히 고전적인 인문학을 신봉하는 교수들이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일까? 또

---

5) Michael J. Hofstetter, *The Romantic Idea of a University: England and Germany, 1770-1850* (New York: Palgrave, 2001) 86~107면 참조.

6) 서양 인문학과 자연과학 사이의 대립과 논쟁의 역사에 관해서는 졸고 「정보화 시대의 인문학: 과학주의의 도전과 새로운 인문학의 가능성」, 『기호학연구』 7 (2000) 315~26면 참조.

훔볼트는 대학의 발전을 위해 국가의 지원이 당연히 필요하다고 전제했으며 고등교육의 목적 자체가 독일제국의 부흥이라는 국가적인 요구에 부응하는 것이었지만, 국가가 개별적인 연구자의 연구에 개입하는 것을 맹렬하게 반대했다. 인격의 도야와 완성이란 자발적인 성장의 결과일 뿐, 미리 정해진 프로그램을 주입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따라서 훔볼트는 연구와 교육의 완전한 자유를 주장했다. 그러나 현재의 대학평가제도는 연구와 교육의 자유를 근원적으로 제한하고 있다. 단적으로 말해서, 한국의 인문학 교수들은 대학평가에서 연구실적으로 인정되는 '학술지논문', 즉 원고지 120장 내외의 글 말고는 다른 어떤 형식의 글쓰기도 적극적으로 하지 않는다.[7] 그렇게 진행한 '연구'의 내용을 강의에 반영하는 일도 물론 없다. 중요한 것은 약속된 강의를 약속된 시간에 실시하여 학생들을 화나지 않게 하는 일이지, 정작 강의의 내용이 무엇이었는지는 강의평가에 드러나지 않기 때문이다. 대학평가에서 대학의 연구비 총액은 그 대학의 연구력 또는 내재적 가치와 동일시된다. 교수 개인도 마찬가지다. 기업에서 연봉이 한 개인의 가치를 대변하듯 대학에서도 각 교수의 연구비 총액은 그의 연구능력, 즉 그의 내재적 가치와 동일시된다. 해마다 편성되는 정부의 막대한 연구개발비는 당국이 선정한 연구주제를 가장 잘 수행할 수 있는 연구자나 연구집단에게 주어진다. 개별 연구자가 '자유롭게' 설정한 연구주제도 실상은 당국에서 이미 설정한 연구의제를 크게 벗어나는 일이 없다. 왜냐하면 개별 연구자들에게도 이제는 연구의 내용보다 연구비 수주의 가능성이 더 중요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많은 교수들은 이제 연구가 중요해서 연구비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연구비가 중요하기 때문에 '연구'를 한다. 이러한 본말전도의 가장 큰

7) 논문이라는 형식의 글쓰기에 대한 비판적 성찰은 김영민 「논문중심주의와 우리 인문학의 글쓰기」, 『탈식민성과 우리 인문학의 글쓰기』(민음사, 2000) 13~36면 참조.

폐해는 연구의 자율성과 자발성을 제도적으로 말살한다는 데 있다. 교수들이 학문적 열정이 아니라 '돈'과 '점수'에 의해서만 움직인다면, 그들이 수행하는 이른바 '연구'의 결과란 과연 어떤 성격의 '업적'일까?

대학평가를 교수들에게 적용하면 교수평가가 된다. 보통 교육과 연구 두 영역, 또는 봉사 같은 기타 영역까지 세 영역으로 나뉘지만, 여기서도 핵심은 연구다. 그리고 평가의 핵심은 물론 교수들의 연구실적을 최대화하는 데 맞춰져 있다. 갈수록 정교해지는 연구평가제도는 모든 교수들의 생활을 강력하게 옥죄고 있는데, 가장 치명적인 폐해는 그것들이 교수들에게 연구의 시간과 사유의 시간을 허락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대부분의 대학에서는 교원평가를 해마다 실시한다. 그 이유는 세계대학평가와 교육부와 대교협, 외국 평가기관과 연계된 각 언론사의 대학평가가 1년 단위로 실시되기 때문이다. 다른 분야도 마찬가지이겠지만 인문학의 경우, 창의적인 연구를 위해서는 다른 어떤 분야보다도 원전을 읽고 사유하는 시간이 필요하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훔볼트가 "고독과 자유"를 연구의 기본조건으로 제시했던 것이며, 2007년 독일의 인문학 지원 프로그램 '인문학 연구의 자유'는 연구자에게 "돈"이 아니라 "시간"을 확보해주는 것을 기본 목적으로 설정했던 것이다.[8] 하지만 아무리 이렇게 설명을 해도, 1년을 단위로 하는 대학평가의 관행이 쉽게 개선될 것 같지는 않다. 왜냐하면 세계대학평가를 담당하는 4대 기구는 적어도 그 절반이 상업적 기관이고,[9] 그들로

8) Federal Ministry of Education and Research, Germany, *Freedom for Research in the Humanities* (2007) http://www.bmbf.de/en/10567.php.

9) 네덜란드 레이던(Leiden)대학이 주관하는 CWTS(Centre for Science and Technology Studies)와 중국 상하이교통대학이 발표하는 ARWU(Academic Ranking of World Universities)는 상업적 이윤과 직접 관련된다고 할 수 없지만, 영국에 기반을 둔 QS(Quacquarelli Symonds)와 톰슨로이터(Thomson Reuter)가 인수한 『더 타임즈』 세계대학평가는 이윤을 추구하는 민간기업의 사업이다.

서는 더 짧은 기간에 더 많은 상품을 생산하는 것, 즉 이윤을 극대화하는 기업 본연의 목적을 포기할 이유가 전혀 없기 때문이다. 한국의 교육당국이나 관료의 입장에서도 모든 예산집행이 회계연도를 중심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연구비 예산의 효과를 매년 제시할 수밖에 없다. 해마다 발표되는 대학별, 분야별, 프로젝트별, 연구비 액수별 국내외 순위를 그들의 '성적표'로 이해하는 각 대학의 집행부가 연차별 성과에 집착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굳이 설명할 필요가 없다. 중요한 것은 이들 모두의 머릿속에 진리의 탐구와 인재의 양성 같은 고등교육의 이상이 더이상 의미있게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4대 세계대학 평가기관의 운영자는 자기들 통계의 신뢰도와 세계적 영향력, 그리고 그에 따라 늘어나는 부대수입[10] 등이 우선적인 관심사일 것이고, 교육관료들은 어떻게든 자신의 임기 중에 한국 대학의 '경쟁력'이 높아졌음을 외부의 자료를 통해 보여주고 싶을 것이며, 또 대학의 총장들은 자신의 임기 중에 자기 대학의 국내외 랭킹이 상승했음을 보여주고 싶을 것이다. 이런 식의 경쟁에 골몰하는 오늘날의 대학이 더이상 학문을 도야하고 인재를 양성하는 학문적 공동체가 아니라 연구인력을 최대한 '가동'하여 연구·교육상품을 생산·판매하는 기업이 되었다는 건 이제 숨겨야 할 비밀도 아니다.

10) 4개의 세계대학 평가기관 중 적어도 3개의 기관에서 자문써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것은 물론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써비스이고, 마치 토익이나 토플 같은 영어공인시험기관이 영어학원을 운영하는 것과 같다. 랭킹에 집착하면 할수록 이러한 써비스의 매력이 커질 것임은 쉽게 짐작할 수 있다. QS의 써비스는 http://www.iu.qs.com/services/consulting/, 톰슨로이터는 http://thomsonreuters.com/consulting-custom-studies-reports/?subsector=research-management-and-evaluation, 그리고 CWTS는 http://www.cwtsbv.nl/Monitoring---Evaluation에서 관련 정보를 얻을 수 있다.

우리나라의 인문학 평가: 최근의 실태

사실 대학이 급속하게 기업화하고, 그에 따라 교수들의 '생산성'을 새삼스럽게 문제삼기 이전에는 그들의 연구실적에 대해 그렇게 많은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다. 특히 인문학에 관해서는 더욱 그러했는데, 1990년대말부터 시작된 BK(Brain Korea), HK(Humanities Korea) 등 정부 주도의 대규모 연구비 지원정책에 인문학이 포함되고, 여기에 각 대학의 인문학 부문이 경쟁적으로 참여하면서 인문학 교수들의 연구업적이 새삼스럽게 엄정한 '평가'의 잣대 아래 놓이게 된 것이다. 따라서 인문학 교수들의 업적을 체계적으로 분석한 자료가 아직 많지 않은데, 현재까지 나와 있는 것 중 가장 포괄적인 자료는 2006년 9월에 발행된 광주교대 교육학과 박남기 교수의 「대학별 교수업적평가 현황 분석 및 교수업적 평가 모형 개발」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연구보고서는 국내 4년제 대학 전체를 대상으로 했고, 총 1,338명의 현직 교수들이 참여한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므로 우리나라 4년제 대학 전체의 실태를 가장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인문학 평가에 관해 이 보고서가 보여주는 바는 필자 자신의 경험을 광범위한 실증자료로 확인시켜주는 정도라고 할 수 있다. 이 보고서는 연구부문에 관한 인문사회 분야의 교수업적 평가의 특징을 다음과 같이 요약하고 있다.

- 인문사회분야의 저서 분야에 대한 가점을 주고 있으나, 이의 가치를 국제학술지에 대한 가치 이상으로 산정하는 대학은 없었음(좀 더 자세한 분석이 필요한 부분임).
- 가중치는 국제학술지에 대한 비중이 제일 높으며, 그의 1/2 비중을 국내학술지 등에 두고 있음.

- 전반적으로 연구업적의 인정 범위가 엄격해지고 있음[SSCI, 국내 학진등재 등의 논문이 아닌 경우 인정하지 않거나, 인정한다 하더라도 매우 그 비중이 낮음(인정율이 1/2에서 1/10 정도까지 다양)].
- 평가결과는 승진, 재임용 등과 연동되어 활용되고 있었으며, 연구업적이 그 과정의 주요요건이 되고 있음.[11)]

인문학 연구에서 저서의 형태가 더 중요하다는 것은 상식이지만, 저서보다 국제논문에 더 큰 가중치를 부여하는 것은 인문학 교수라면 누구나 알고 있는 사실이다. 또 연구업적의 인정범위가 점점 더 엄격해지고, 국제논문 또는 연구재단의 등재지 이외에는 인정범위에서 제외하는 경향이 있다거나, 이러한 연구실적 평가의 결과를 승진과 재임용 등 중요 결정에 더 깊이 관련시키는 것도 우리 모두가 경험으로 알고 있는 사항이다. 이 보고서에서 "'많은 업적'보다는 '좋은 업적'을 낼 수 있는 풍토를 조성"하고, "학문분야별 차이를 반영"하며, "정부의 SCI 논문 수 위주의 평가의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297면) 제시한 대안적 평가모델(308~309면)도 저서에 대한 가중치를 늘렸다는 것과 국제학술지에 대한 가중치를 조금 줄였다는 것 이외에 기존의 평가기준과 본질적으로 달라진 것이 없다. 비슷한 시기에 출판된 연세대 사회학과 김동노 교수의 논문은 인문학 분야를 특정하여 연구업적 평가의 실태를 좀더 자세히 분석하고 있는데, 장기적 관점의 연구가 가능하도록 해야 하고, 개별 논문에 대한 질적 우수성 평가가 필요하며, 연구결과물에 대한 장기인용도가 반영되는 평가기준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제

11) 박남기 『대학별 교수업적평가 현황 분석 및 교수업적 평가 모형 개발』, 교육인적자원부 정책연구과제-2006-공모-15 (2006년 9월) 80면. 앞으로 이 책에서의 인용은 괄호 안에 면수만 병기함.

시했지만,[12] 김교수가 제시한 대안적 평가모델도 박남기 교수의 모델과 별반 다르지 않다. 조금 더 최근에 출판된 이화여대 문헌정보학과 정연경 교수의 연구도 비슷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질적 평가'의 필요성을 강조하고는 있지만, 그 실질적 어려움을 고백하면서 결국 SSCI와 A&HCI 등의 등재지 국제논문에 가중치를 부여하는 현제도의 불가피성을 인정하는 데 그치고 있다.[13] 이들의 연구는 대체로 타당한 진단과 정당한 방향제시를 하고 있지만, 그것과는 전혀 상관없이 인문학 평가기준은 날이 갈수록 더 악화되고 있다는 것이 필자를 포함한 인문학 교수들이 실감하는 바다.

가령 필자가 근무하는 이화여대는 최근(2014년 6월)에 새로운 교수업적 평가기준을 발표했는데, 여기에 따르면 국제논문에 대한 가중치는 이전의 연구재단 등재지 기준 최대 500퍼센트(이전에는 300퍼센트)로 오히려 증가했다. 또 인문학 분야에서도 승진·승급의 기준요건으로서 각각의 등급마다 무조건 A&HCI급 국제논문을 한편 이상 쓰도록 의무화하는 조항도 신설했다. 가령 조교수가 부교수로 승진하기 위해서는 700퍼센트의 연구업적을 내야 하는데, 적어도 240퍼센트(Scopus급 논문 두편) 이상은 영어로 출판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번 개정안의 또 하나의 특징은 정년을 보장받은 정교수들에 대한 평가를 강화했다는 것이다. 이화여대는 오래전부터 정교수로 정년을 보장받은 이후에도 정교수를 A, B, C로 나누어 내부승급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6년을 기본 연한으로 한 각 등급에 각각 800퍼센트(이전에는 600퍼센트)의 연구업적을 요구하고 있으며, 마찬가지로 그중 최소 240퍼센트

12) 김동노·이민행·박태균「인문학 분야 교수 연구업적 평가안 개발」,『교육평가연구』19.3 (2006) 11~12면.

13) 정연경·최윤경「인문·사회과학 분야 교수의 연구업적물 평가에 관한 연구」,『정보관리연구』42.3 (2010) 211~33면.

를 영어논문으로 채우도록 새롭게 규정하고 있다. 더욱 중요한 것은 이것이 승진·승급을 위한 '최소한'의 요건이라는 점이다. 이화여대의 모든 교수들은 매년 최소 연구의무를 채워야 하고, 인문학의 경우 이것이 175퍼센트다. 논문으로 이것을 채우려면 연구재단 등재지에 두 편(200퍼센트)을 쓰거나 C급 이상의 국제지에 한편을 써야 한다는 뜻이다. 반면 저서나 번역의 경우는 단독 연구인 경우에도 최대한 100퍼센트(이전에는 200퍼센트)밖에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점수를 채워야 하는 처지에서는 거의 무의미한 일이라고 할 수 있다.

물론 연간의무 연구점수를 채우지 못한다고 해당연도에 당장 큰 문제가 생기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그해의 연구성과는 그해에 결정되는 인센티브의 액수와 직결될 뿐만 아니라, 개인별·학과별·연구소별로 해마다 지원하는 연구비 신청서의 기본 지수가 되기 때문에 실제로는 항상적으로 상당한 압력을 받을 수밖에 없다. 정년을 보장받은 정교수들은 그나마 연간의무 연구점수를 매번 채워야 하는 부담에서 어느정도 자유롭기는 하지만, 그들 역시 매년 평가에 기준하여 지급되는 인센티브에 신경 쓰지 않을 수 없으며, 학과별로 합산되는 연구점수에 따라 각종 학과별 프로젝트 지원의 성패가 결정되기 때문에 학과의 실적을 고려한다면 해마다 이루어지는 업적평가에서 완전히 자유롭기 어렵다. 학교당국은 교수 개인의 연구실적만 집계하는 것이 아니라 학과별·전공별·단과대학별 연구성과를 집계하여 공표하고, 이것을 교내 자원을 분배하는 기준으로 삼기 때문에, 사실상 웬만한 배짱과 결단력이 없다면 어떤 직급의 교수라 하더라도 이러한 능력별 보상 시스템의 압력에서 벗어나기 어렵다.

필자가 소속된 대학의 예를 자세하게 소개한 이유는 악화일로에 있는 인문학 교수들의 연구조건을 좀더 정확하고 현장감 있게 설명하기 위해서다. 물론 한국의 모든 대학이 이와 똑같은 규정을 가지고 있지

는 않겠지만, 교육부와 연구재단이 주도하는 대학평가의 틀에 똑같이 놓여 있는 한 다른 학교들의 조건도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다. 사실 같은 분야의 교수라고 해도 학교와 세부전공이 다르면 다른 쪽의 사정을 정확하게 알기란 매우 어렵다. 자기가 속한 학교라도 규정이 자주 바뀌기 때문에 자기에게 적용되는 규정조차 정확하게 알지 못하는 경우도 많다. 필자 주변의 수많은 어리숙한 인문학 전공 교수들은 자기 자신의 연구실적 평가결과를 통보받고 나서도 그 점수의 의미가 뭔지, 왜 그런 점수가 나왔는지를 잘 이해하지 못한다. 이런저런 방식으로 수치화된 자신의 객관적인 '성적표'를 보면서 알 수 없는 모멸감에 '괴로워할' 뿐이다. 알고 보면 인문학 전공 교수들이 유독 이러한 제도의 피해를 가장 많이 보면서도 그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무지한 경우가 많다. 그것은 제도 자체가 복잡하고 어려워서이기도 하지만, 그 제도를 적용하는 과정에서 드러나는 여러가지 현상들이 하나에서 열까지 교수들이 일반적으로 가지고 있는 직업적 자긍심을 크게 손상하기 때문이다. 인문학 교수들의 드높은 사유의 높이에서 보면 연구업적 평가제도의 남루한 현실은 극도의 부조리일 뿐이고, 그것의 세세한 공과를 점수로 환산한다는 것 자체가 자신의 학문에 대한 모욕으로 느껴질 가능성이 많다. 하지만 내 눈을 가린다고 해서 남루한 현실이 없어지는 것도 아니고, 성적표를 치워버린다고 해서 성적이 지워지는 것도 아니다. 이러한 심리적인 저항감에다가 '나만 아니면 된다'거나 '나만 알면 된다'는 식의 얄팍한 이기주의가 합쳐져서 갈수록 악화일로에 있는 대학평가제도를 무책임하게 방조하게 되며, 그럼으로써 가능한 제도개선의 여지마저도 원천적으로 봉쇄하는 측면이 없지 않다.

‘초라한’ 인문학의 성적표?

그렇다. 필자를 포함한 대부분의 인문학자들은 사회로부터 ‘부당한’ 대접을 받고 있다고 느낀다. 위에서 살펴본 연구업적 평가제도와 관련해서는 더욱더 그렇다. 왜 우리는 부당하게 취급되는가? 인문학자들은 분개한다.[14] 하지만 비분강개로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는 데 더 큰 문제가 있다. 대부분의 인문학자들이 암암리에 마음속에 품고 있는 ‘이상적인’ 연구환경, 그러니까 어떠한 사회·정치적 압력 또는 경쟁이 없이 오로지 연구주제만 생각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꿈꾼다. 하지만 솔직히 말해서 역사적으로 봐도 그런 환경은 그렇게 흔하지 않았던 것이 사실이다. 더욱이 우리의 대학은 세속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성직자를 길러냈던 중세 서양의 대학이나 훔볼트가 살았던 1809년의 베를린대학이 아닐 뿐만 아니라, 꼭 노벨문학상을 타야 문학이 융성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춤과 노래는 물론이요 요리까지도 오디션을 해서 1등을 가려내야 직성이 풀리는 사회적 분위기에서 살고 있지 않은가? 그렇다면 이제는 우리도 인문학이 놓인 상황을 좀더 현실적인 눈으로 다시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다. 인문학자들이 게을러서 그렇지 열심히만 하면 아무 문제가 없다는 식의 근거없는 낙관론이나 이제 인문학은 끝났다는 식의 성급한 비관론, 또는 알고 보면 인문학이 여러모로 유용하다는 현실영합론에서 벗어나려면, 좀 괴롭더라도 우리의 ‘성적표’를 좀더 차분하게 뜯어볼 필요가 있다는 말

14) 앞서 소개한 서보명 교수의 『대학의 몰락』이 대표적인 예다. 최근의 논문으로는 고부응 「한국연구재단의 학문 관리와 학문의 몰락」, 『문화과학』 69 (2012년 3월) 262~71면; 같은 저자의 「대학의 관리체제와 대학의 몰락」, 『안과밖』 36 (2014 상반기) 163~86면. 필자 자신도 같은 취지로 분노에 동참한 적이 있다. 졸고 「최근의 대학개혁 논의를 보는 한 소장교수의 시각: 대학교수는 놀고 있는가」, 『월간 사회평론 길』 98.5 (1998) 168~71면; 졸고 「신자유주의 시대의 인문학, 어디로 가고 있는가」, 『안과밖』 26 (2009 상반기) 281~99면 참조.

이다.

한국연구재단 통계에 따르면, 2011년을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전체 연구개발 투자는 총 450억 달러(4조 8479억원)로 세계 6위 수준이고, 이는 영국의 연구개발 투자를 넘어서는 수준이다. 2011년에 정부가 한국연구재단을 통해서 인문학을 지원한 액수는 사회과학과 합쳐서 총 2,085억원이며, 이는 정부가 학술연구를 위해 지원한 전체 액수의 10.8퍼센트에 해당한다. 같은 기간 4년제 대학에 근무하는 인문학 전임교수가 수주한 연구비 총액은 총 1,318억원(전체 대비 2.7퍼센트)이며, 그중 중앙정부에서 제공한 연구비는 952억원(전체 대비 2.5퍼센트)이다. 2011년 기준으로 4년제 대학 인문학부문 전임교수 수는 10,535명(전체 대비 14.9퍼센트)이므로, 인원 수로는 14.9퍼센트의 집단이 액수로는 2.5퍼센트를 수령했으므로 인문학은 정부로부터 재정지원을 다른 분야의 약 16.8퍼센트밖에 받지 못한 것이다. 바꾸어 말하면 인문학 교수 6명 정도가 받을 금액을 다른 분야의 교수 1명이 받았다는 뜻이다. 인문학에 대한 이러한 '홀대'는 인접 분야라고 할 수 있는 사회과학과 비교해도 분명히 드러난다. 2011년 기준 4년제 대학 사회과학 교수들이 수주한 중앙정부 연구비는 2011억원(전체 대비 5.3퍼센트)이고 이것은 사회과학 교수들이 인문학 교수들보다 2배 이상의 지원을 받았다는 뜻이다. 1인당 연구비를 비교해봐도 인문학은 1,251만원, 사회과학은 2,013만원으로 사회과학이 인문학의 1.6배의 연구비를 수주한 것으로 나온다. 그렇다면 이렇게 지원받은 인문학 교수들은 어떤 성과를 냈을까?

연구실적이 대체로 1년 후에 반영되었다고 가정하고 2012년의 실적을 보면 다음과 같다. 인문학은 1인당 평균 0.8편의 논문을 게재했고, 사회과학은 1인당 평균 0.96편을 게재했으므로 절대치에 있어서는 사회과학이 1인당 0.16편을 더 많이 게재했다. 그러나 논문 1편을 만들어

내는 데 들어간 평균 연구비를 비교하면, 인문학이 1,564만원, 사회과학이 2,097만원으로, 투자 대비 생산성에서 사회과학은 인문학의 75퍼센트에 불과하다. 같은 방식으로 자연과학을 살펴보면 1인당 평균 1억 2,514만원, 1인당 평균 0.98편, 1편당 1억 2,769만원이므로 투자 대비 생산성은 인문학의 12.2퍼센트다. 공학의 경우는 그 격차가 더 심하다. 1인당 평균 1억 5,799만원, 1인당 평균 1.08편, 1편당 1억 4,629만원이므로 투자 대비 생산성은 인문학의 10.7퍼센트에 불과하다. 이러한 비교는 인문학이 공학보다 10배쯤 훌륭하다는 주장을 펴기 위한 것이 물론 아니다. 대학의 연구실적 평가제도가 원용하는 수량적 평가, 특히 그들이 그토록 신뢰하는 절대 수에서도 인문학의 실적이 그렇게 열등하지 않으며, 논문의 투자 대비 생산성을 따지자면 인문학이 오히려 나은 측면도 있음을 지적하기 위해서다. 말하자면, 그들의 잣대로 작성된 우리의 '성적표'도 우리가 막연하게 생각했던 것만큼 그렇게 나쁜 것만은 아니었다는 것이다.

인문학 평가기준, 과연 정당한가?

사실 대부분의 인문학 교수들이 불만스러워하는 것은 자신이 평가의 대상이 된다는 사실 자체가 아니라 매우 잘못된 방식으로 평가된다는 점이다. 학문적 성과를 평가하는 데 그 내용을 묻지 않고 무조건 '편수'와 '건수'를 센다든지, 투자 대비 생산성을 따지는 일의 무의미함은 위에서도 어느정도 드러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경쟁과 생산력 담론은 여전히 연구실적 평가제도를 추동하는 가장 강력한 엔진으로 작동되고 있다. 학문적 성과를 수량적으로 측정하고 그 지표를 비교하여 개인 간, 대학 간에 경쟁을 붙이는 정책은 비단 인문학만

의 문제는 아니다. 하지만 이공계의 연구모델을 기본으로 하여 개발된 수량적 평가방식을 인문학에 원용하는 것은 앞서 설명한 것처럼 인문학의 '정상적인' 연구를 근본적으로 가로막는 것이 엄연한 사실이다.

우리가 이미 인용한 간단한 통계를 바탕으로 이화여대의 평가기준을 검토해봐도 그 문제점은 금방 드러난다. 우선 1인당 평균 0.8편(국내 0.76편, 국제 0.02편)의 논문을 생산하는 인문학 교수들에게 1.75편의 논문을 기본 의무로 제시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또 인문사회계열 교수의 91.7퍼센트가 국내 학술지에 논문을 싣고 있으며 국제논문의 1인당 편수가 0.02에 불과한데도, 국제 학술지의 논문에 최대 500퍼센트까지 가산점을 부여하는 것은 또 무슨 의미인가? 이것은 국내논문은 그 내용이 무엇이든 무조건 평균적인 논문생산 능력의 2배 이상을 쓰거나 아니면 가산점이 붙는 국제논문을 집필하라는 뜻이다. 인문계 교수들의 '실태'를 조사한 통계에 따르면 단행본 저술의 경우 인문학이 1인당 0.17편(전 학술분야에서 1위)을 생산하면서 저술 전체의 28.2퍼센트를 차지하고 있다.[15] 그런데도 이화여대의 새 규정은 저서의 출판을 1~2편의 국내논문에 해당하는 실적으로 인정함으로써 인문학 교수들이 '본업'에 종사할 수 있는 길을 실질적으로 봉쇄하고 있는 셈이다. 사실 이러한 연구실적 평가제도는 이화여대에만 국한된 것도 아니고, 이화여대가 처음 만들어낸 것도 아니다. 결국 4대 세계대학평가라는 학문적 올림픽에서 좋은 성적을 내기 위해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이 만들어낸 평가방식이고, 이화여대의 제도는 그것을 국지적으로 반영하고 있을 뿐이다. 그렇다면 인문학 교수들은 어떻게 평가받고 싶은가? 그 대답은 간단하다. 생산성에 대한 맹신과 무조건적

15) 한국연구재단 『대학연구활동 실태조사분석보고서』(2012) 69~71면. 이 보고서는 최근 5년간(2007~2011년) 전임교원들의 저술발표 실적이 23.9% 감소했고, 그 원인을 "최근 대학의 교원평가에서 논문실적을 강조하기 때문"으로 분석하고 있다.

인 경쟁에서 벗어나 정상적인 평가, 즉 한국연구재단의 보고서가 보여주는 그들의 자연스러운 '실태'에 입각한 평가를 받고 싶은 것이다. 말하자면, 연간 기본 연구의무를 전체 평균인 0.8편으로 낮추고, 1인당 0.02편에 불과한 국제논문에 대한 과도한 우대를 철회하는 것이 우선할 일이다. 그리고 그렇게 철회된 가산점을 인문학 연구활동의 본령인 저서에 부여하는 것이 더 합리적이고도 필요한 일이다. 하지만 이것은 이화여대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일이 결코 아니다. 이것은 교육부와 연구재단이 '인문학의 세계적 경쟁력'이라는 황당한 신화에서 벗어나서 '4대 세계대학평가'로부터 시작되는 학문적 먹이사슬에서 인문학을 과감하게 제외시킴으로만 가능한 일이다. 어차피 정부의 입장에서야 인문학은 연구비 '2.5퍼센트'의 비중일 뿐이고, 인문학 연구자 91.3퍼센트가 우리말로 출판하며, 인문학 분야의 국제논문 비중이 전체의 2퍼센트에도 미달하는 만큼, 인문학을 한국 연구생태계의 천연기념물로 지정하여 보호한다 해도 대세에 큰 지장이 있는 것은 아니지 않는가?

정부의 인문학 진흥정책과 인문학 평가

2013년 7월 25일, 박근혜 정부는 대통령 직속으로 '문화융성위원회'를 출범시켰다. "우리 사회에 필요한 인문학적 상상력의 발현을 위한 범정부 차원의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기 때문이라는 것이 대통령이 직접 밝힌 위원회의 설립 취지였다. "우리 사회에 필요한"이라는 수식어는 아마도 '경제적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데 기여하는'이 아닐까 하는 의심을 거둘 수는 없지만, "인문학적 상상력의 발현"에 "범정부적인 노력"을 기울여준다는 데야 인문학 종사자로서 반대할 이유가 없

다. 그 노력을 구체화하기 위하여 2013년 10월에는 문화융성위원회 산하에 민간 전문가를 중심으로 '인문정신문화 특별위원회'를 구성했고, 이 특별위원회의 토론을 거쳐서 2014년 8월에는 교육부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인문정신문화 진흥을 위한 7대 중점과제'를 발표했다. 이 중점과제의 세번째 항목은 "인문분야 학문후속세대 육성 및 학술역량 제고"인데, 그 안에는 인문학 평가제도와 관련하여 상당히 의미있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인문학 분야 저술-논문에 대한 균형있는 연구문화 정착

- 인문사회 분야 개인 연구지원 사업에서 연구자가 다양한 연구결과물 유형* 중 자신의 연구형태에 맞춰 선택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

  * 저술, 논문, 출판 및 콘텐츠, 데이터베이스 구축 등

- 정부재정시원사업*의 평가 개선을 통해 교원의 업적평가에서 논문뿐만 아니라 저술, 번역 등 다양한 성과를 인정

  * 인문사회 분야 학술지원 사업, BK21플러스 사업 등

- 저술-출판성과에 대한 출판 유형별* 평가시스템 시범 도입

  * (유형 예시) 학술서, 교양서, 학술교양서 등[16)]

이 대목 다음에는 "저술업적 인정 개선 및 지원"이라는 항목을 별도의 박스 속에 제시하면서 종전에 논문 2편으로 환산되던 저술 실적을 논문 3편으로 인정하는 개선책을 당장(2014년) 시행하겠다고 친절하게 밝히고 있다. 인문학에 지원하는 연구비 규모를 늘리겠다는 것, 연

16) 교육부·문화체육관광부 「인문정신, 문화융성의 길을 열다: 인문정신문화 진흥을 위한 7대 중점과제」(2014년 8월). http://www.mcst.go.kr/web/s_notice/press/pressView.jsp?pSeq=13657.

구논문만이 아니라 저술을 포함한 다양한 자료를 연구성과로 인정하겠다는 것, (단행본) 저술의 환산점수를 논문 2편에서 3편으로 늘리겠다는 것은 대학의 인문학 연구자들에게는 매우 고무적인 조치임에 틀림없다. 그러나 정부의 이러한 의도가 현장의 인문학 교수들에게 실제적인 영향을 미치려면 이러한 조치가 각 대학의 교원평가제도에 적용되어야 하고, 그것이 가능해지려면 정부가 앞장서서 인문학 연구를 생산력과 무한경쟁의 담론에서 완전히 제외시켜야 한다. 대학의 인문학을 4대 세계대학평가로부터 시작되는 평가 네트워크에 그대로 남겨놓는 한 각 대학의 교원평가제도가 그것을 반영할 리 없고, 전체적으로 경쟁체제가 살아 있는 한 인문학에 아무리 연구비를 많이 지원한다고 해도, 그리고 저술을 아무리 여러편의 논문으로 환산해준다고 해도, 결국 더 많은 연구비는 더 많은 실적을 요구할 뿐, '인문적 상상력이 발현'되는 일은 만무할 것이기 때문이다. '상상력'은 더 많은 돈과 더 심한 경쟁에서가 아니라 시간적 여유와 깊은 사유에서 비롯되는 것이다. 돈을 늘리는 대신 경쟁을 없애는 것, 그것이 '상상력을 발현'시킬 가능성이 훨씬 더 많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인문학을 진흥하겠다는 이 야심찬 정책선언의 어디를 읽어봐도 인문학을 사시사철 진행되는 이 거대한 학문적 올림픽에서 열외시켜주겠다는 의도는 보이지 않는다. 앞서 말했듯이 인문학이 끝이 없는 경주에서 이탈하겠다는 것은 아무것도 하지 않겠다는 뜻이 아니다. 경주를 하되, 인문학에 적합한 경주를 하도록 해달라는 것이다. 한국의 인문학은 일차적으로 한국사회에 기여해야 하고, 한국의 연구생태계 또는 한국어로 된 지적공간을 풍요롭게 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삼아야 한다. 그렇다면 인문학자의 경주는 그러한 목적을 달성하기에 가장 좋은 규칙 아래서 이루어져야 하지 않겠는가?

인문학 평가의 개선방향: 독자성, 다양성, 지역성

인문학을 학문적 올림픽에서 열외로 해야 한다는 것은 맹목적인 생산성 경쟁을 지양하자는 것이지 무조건 그냥 내버려두라는 뜻이 아니다. 인문학 연구성과에 대한 평가가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한지에 관해서는 좀더 전문적인 토론이 있어야 하고, 또 그에 따라서 인문학 연구 평가기준도 일정한 제도적 합리성을 갖는 방식으로 달리 정해져야 할 것이다. 하지만 많은 평가 전문가들이 제대로 된 연구를 해보지도 않고, 인문학 연구의 성과는 개념화하거나 표준화하기 어렵다고 주장하면서 자연과학의 평가방식을 조금 변형하여 제시하는 데 머물러왔다. 인문학의 연구성과를 개념화하는 것도 어렵고, 개념화한다 하더라도 그것을 계량화하기는 더욱더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인문학 평가에 대한 적절한 대안은 어느 한 사람의 머리에서 단박에 나올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인문학자들을 포함한 많은 사람들의 연구와 토론을 거쳐서만 만들어질 수 있을 것이다. 필자는 여전히 '분노하는' 인문학자의 한 사람일 뿐, 대안적 제도를 완성형으로 제시할 수 있는 학문적 전문성을 가지고 있지는 못하다. 하지만 한국 인문학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할 대안적 평가제도는 적어도 다음과 같은 인문학 본연의 특성을 바탕으로 만들어져야 한다.

독자성

인문학자들이 현재의 제도에 문제제기를 하는 가장 큰 이유는 그것이 인문학의 정상적인 연구를 방해한다고 느끼기 때문이다. 원고지 120매 내외의 국내논문이나 A&HCI나 Scopus에 등재된 외국 학술지에 국제논문의 형태로 가능한 한 빨리, 많이 출판하라는 것이 현재 평

가제도가 인문학자들에게 보내는 메시지라면, 적어도 인문학에 관한 한 그 메시지는 틀렸다는 것이다. 인문학의 연구성과는 학술지 논문보다는 호흡이 긴 글이 더 적합하고, 인문학의 특성상 세계의 독자보다는 국내의 독자들을 위해 한국어로 출판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빨리, 많이' 출판하라는 것은 기업에 적합한 생산성 논리일 뿐 인문학에는 어울리지 않는 요구라는 것이다. 인문학을 연구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쉽게 동의하는 이러한 입장을 그동안 평가를 담당한 교육부나 연구재단은 철저히 묵살해왔다. 인문학자들은 경쟁을 맹신하는 생산성 담론과 제도적 합리성을 가장한 규범적 폭력으로 인해 자신들의 연구 여건을 규정하는 데 자기 목소리를 낼 기회를 제대로 얻지 못했던 것이다. 따라서 앞으로 인문학을 평가하려면 무엇보다 인문학의 독자성을 확실하게 인정하는 체계, 즉 인문학자 내부의 의견과 인문학의 내재적 특성을 반영한 평가지표를 가져야 한다.

사실, 그동안 교육부나 연구재단은 평가지표를 정하면서 인문학자들의 의견을 제대로 물은 적이 없었다. 인문학 평가를 다룬 연구도 대부분 교육학이나 사회학, 문헌정보학 등 사회과학 연구자들이 진행했을 뿐 인문학자 내부의 의견은 이른바 '전문가'가 아니라는 이유로 제대로 조사된 적조차 없었다. 앞서 인용한 박남기 교수의 조사가 그나마 현장의 인문학자들의 목소리를 반영한 유일한 조사인데, 다른 영역에 비해 인문사회 영역의 교수들이 "학문영역별, 전공별 차이의 반영을 강화한 질적 평가"에 대한 선호도가 높다는 상식을 확인해주는 정도였다.[17] 반면에 유럽에서는 서지통계학(Bibliometrics) 전문가들이 꽤 오래전부터 인문학적 특성을 더욱 정교하게 반영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왔다.[18] 이들의 기본적인 주장은 입수 가능한 서지학적 자료를

17) 박남기, 앞의 보고서 186~87면.
18) 이 분야의 가장 선구적인 시도는 독일의 인문학을 대상으로 한 T. Finkenstaedt,

좀더 세밀하게 분석하면 인문학 연구의 '질'을 상당부분 계량화할 수 있고, 이를 기본적인 자료로 삼아 인문학자들의 작업의 '가치'를 과학적인 방식으로 측정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것은 물론 인문학적 연구의 가치는 오로지 시간을 충분히 갖고 관련 학계의 검증을 거쳐야만 천천히 확립될 수 있다는 인문학자들의 통상적인 믿음과 상반되는 것이긴 하지만,[19] 인문학의 내재적 특성을 어떻게든 반영해보겠다는 시도라는 측면에서는 발전적인 측면이 없지 않다. 가령, 인문학자들 스스로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평가지표가 무엇인지를 체계적인 조사방법으로 확립하고자 하는 최근의 시도는 우리에게도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다.[20] 인문학 평가에서 인문학의 독자성을 살리는 일은 평가지표

"Measuring Research Performance in the Humanities," *Scietometrics* 19.5/6 (1990) 409~17면. 최근의 가장 대표적인 연구자는 4대 세계대학평가 발행기관 중 하나인 레이던대학 CWTS 소속의 Henk F. Moed다. Henk F. Moed, Marc Luwel, and A. J. Nederhof, "Towards Research Performance in the Humanities," *Library Trends* 50.3 (Winter 2002) 498~520면. 이 분야의 가장 최근의 성과는 Moed가 주도하는 *Research Trends* 32 (March 2013). http://www.researchtrends.com/category/issue-32-march-2013/ 인문학 특집호 "New Perspectives on the Arts & Humanities"에서 가장 잘 확인할 수 있다.

19) John Guillory, "Valuing the Humanities, Evaluating Scholarship," *Profession* (2005) 30면 참조.

20) Seven E. Hug, Michael Ochsner, and Hand-Dieter Daniel, "Criteria for Assessing Research Quality in the Humanities: a Delphi Study among Scholars of English Literature, German Literature and Art History," *Research Evaluation* 22 (2013) 369~83면. 이 논문에 따르면, 대상이 된 세 분야의 교수들이 공통적으로 동의한 평가지표는 "학술적 교류, 혁신 및 독창성, 학술적 엄밀성, 문화적 기억의 함양, 연구공동체에서의 영향력, 개방성, 박학다식, 학술적 열정, 앞으로의 학술적 비전" 등이었다. 이것들이 각각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해서는 물론 또다른 연구가 필요하겠지만, 평가지표를 인문학자들 자신의 생각에 입각하여 정하겠다는 발상 자체가 중요하다. 인문학 평가에 인문학 내부의 의견을 좀더 반영할 필요가 있다는 문제의식은 최근 교육부와 연구재단의 움직임에서도 감지되는데, 2015년의 BK+ 프로그램 재평가와 중간진입을 위한 인문학 지표선정 전문가회의가 그 한 예다. 인문학 전공 교수들로 구성된 전문가회의는 무제한 경쟁을 부추기는 양적 경쟁과 국제논문에 대한 과도한 가산점 부여를 지양하는 것을 주 내용을 하는 개정 시안을 확정하고, 현재 교육당국과 최종안을 조율 중이다. 「전문학술서·고전번역은 논문보다 3-5배 가중치 주자」, 『교수신문』 2014년 7월 29일. http://www.kyosu.net/news/articleView.html?idxno=29280.

를 개정하는 것 이외에도 피평가자의 선택범위를 넓히는 것으로도 확보할 수 있다. 박남기 교수나 김동노 교수의 제안대로 피평가자가 스스로의 평가방식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한다든지, 자신이 선택한 트랙에 따라 특화된 평가방식을 따라갈 수 있게 하는 것도 연구자의 자율성을 신장하고 평가에 대한 저항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이다.

다양성

다들 인문학 연구의 객관적 평가가 어렵다고 주장하는 것은 인문학의 연구주제나 방법론, 연구기간, 연구결과물의 형태 등이 매우 다양하기 때문이다. 문제는 이러한 인문학의 내재적인 다양성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과학적 평가의 필요성을 들어 일률적인 규범을 강제하기 때문에 발생한다. 가령, 인문학 연구는 시급한 현실의 필요성에 의해 촉발되는 경우가 거의 없고, 연구의 주제는 연구자의 호기심과 학문적 관심사에 따라 결정되는 경우가 많다. 연구방법도 원전 연구부터 이론의 적용, 발굴과 해석, 탐문조사와 통계, 번역과 주해 등 매우 다양하다. 또 연구의 결과로 도출된 결론의 '독창성'도 천차만별일 수밖에 없다.[21] 그리고 그 '독창성'이 가지는 가치가 객관적인 자료로 확인되는 데는 시간이 많이 걸린다. 그러나 실적평가가 현실적으로 요구하는 계측 가능성, 표준성, 일관성, 형평성 등 평가제도의 불가피한 규범성은 인문학의 이러한 내재적 다양성과 근본적으로 모순관계에 놓여 있다.[22] 엄밀하게 말해서 인문학 연구는 평가제도에 본질적으로 적대적이다. 인문학을 위해서 평가를 포기할 것인가, 아니면 평가를 위

21) Joshua Guetzknow, Michèle Lamont, and Grégoire Mallard, "What is Originality in the Humanities and the Social Sciences?,"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69 (April 2004) 190~212면 참조.

22) Guillory, 앞의 글 29~30면.

해 인문학을 희생할 것인가? 양자택일이 불가피하다면 그 답은 자명하다. 앞서 필자가 인문학을 한국 연구생태계의 천연기념물로 지정하고, 경쟁이 아니라 보호의 대상으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 물론 인문학도 현실의 제도에 속해 있는 한 일정한 사회적 책무성(accountability)을 가져야 할 것이다. 하지만 그러한 책무를 묻는 방식에 있어서도 인문학의 경우는 평가의 규범성보다는 인문학의 다양성을 절대적 우위에 두어야 한다. 평가의 객관성과 형평성, 실효성 같은 평가의 신뢰도보다는 인문학 연구의 온전한 완성을 더 중요하게 생각해야 한다는 뜻이다.[23] 기본적으로 인문학 연구는 일정한 연구용역 계약에 따라 일정한 시간에 일정한 형태로 완성해서 제출해야 하는 보고서가 아니라, 그 자체의 논리에 따라 적절한 시간의 경과와 더불어 완성되었을 때에만 비로소 일정한 가치를 지닐 수 있는 독자적인 학문적 실체라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 연구비를 통한 인문학 지원은 오로지 그러한 이해를 바탕으로 진행되어야만 그 해악에서 자유로울 수 있다. 인문학 평가는 수량화와 수학적 정합성을 전제하는 언어로부터 자유로워져야 하고, 인문학을 위한 평가의 언어 자체가 과학보다는 인문적 특성을 가져야 한다. 서양의 어떤 학자가 했다는 유명

23) 이런 맥락에서 유럽의 인문학 지원기관 연합체인 HERA(Humanities in the European Research)에서 진행한 '유럽의 인문학 연구의 평가와 벤치마킹을 위한 타당성 연구' 최종보고서에서 인문학 연구의 평가에 관한 전체적(holistic) 접근의 필요성을 언급한 것은 매우 의미심장하다. "전체적 접근은 연구의 질과 수행에 관한 좀더 정확한 그림을 얻기 위해 다양한 요인을 통합하여 고려하는 것을 의미한다. 연구의 질을 측정하는 데 적합한 단일한 지표는 없다. 평가의 초점을 연구결과물의 질에만 둔다면 연구집단 또는 연구환경의 질을 반영하는 가치있는 연구활동이나 협력의 형태들이 그러한 초점에서 벗어나 있다는 이유로 무시될 위험이 있기 때문이다." *Feasibility Study: The Evaluation and Benchmarking of Humanities Research in Europe* (Jan. 21 2008) Arts and Humanities Research Council 10면 참조. 이 보고서는 기본적으로 서지통계학적 평가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도 "인문학 연구의 연속성, 분야의 다양성, 동료 평가의 중요성, 더 나은 평가자료 수집의 필요성" 등 인문학의 고유한 특성을 고려한 평가의 원칙을 설득력있게 제시하고 있다.

한 말처럼 "셀 수 있는 것이라고 모두 중요한 것은 아니며, 중요한 모든 것을 다 셀 수 있는 것은 아니기"때문이다.[24]

지역성

인문학은 보편적인 기초학문으로 알려져 있지만, 역사적으로 보면 특정한 목적성을 띤 경우가 많았다. 그리스의 인문학이 도시국가를 이끌고 갈 지도자적 시민을 양성하는 목적을 가졌다면 중세의 인문학은 교회의 종교적 지도자를 양성하는 것을 일차적인 목적으로 했다.[25] 근대 대학을 만든 훔볼트의 인문학은 나뽈레옹의 점령으로 망해가던 프러시아를 되살릴 수 있는 엘리뜨 인재의 양성을 당면과제로 삼았고,[26] 현대 미국의 인문학은 국민들에게 미국식 민주주의를 교육하는 것을 목적으로 삼는다.[27] 인문학은 언제나 한 사회의 이상적 인간형과 관계가 있고, 그러한 인간형을 양성하여 사회에 공급함으로써 사회적 통합과 국가적 발전을 도모한다. 그리고 인문학이 목표로 하는 이상적인 인간형은 시대마다, 지역마다 서로 다를 수밖에 없다. 한국의 인문학은 어떤 목표를 가지고 있는가? 한국의 인문학도 당연히 한국사회의 통합과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건전한 시민의 양성을 목표로 한다고 봐야 한다. 그렇다면 인문학 평가는 이러한 기본적 목적에 비추어 그 성과를 평가해야 마땅하다. 그러나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은 한국 고등교육의 국제화를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으며, 그에 따라 모든 연구영

---

24) William Bruce Cameron, *Informal Sociology A Casual Introduction to Sociological Thinking* (New York: Random House, 1963) 13면.

25) 서양인문학의 이념에 관해서는 앞에 인용한 졸고 「정보화 시대의 인문학」 306~15면 참조.

26) 졸고 『미국과 독일의 인문학 지원정책 연구』 인문정책연구총서 2011-03(경제·인문사회연구회, 2012) 3~6면 참조.

27) Martha C. Nussbaum, *Not For Profit: Why Democracy Needs the Humanities* (Princeton: Princeton UP, 2010) 2장 "Education for Profit, Education for Democracy" 참조.

역에서 그 연구활동이 국제적 기준과 수준에 도달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한 움직임에는 암암리에 그러한 국제적 기준과 수준이 매우 보편적이고, 보편적인 적용이 가능하다는 전제가 깔려 있다. 과학기술을 담당하는 자연과학과 공학에서는 물론 그럴 수 있다. 하지만 인문학은 사정이 다르다. 한국의 인문학적 연구성과는 기본적으로 한국의 국민을 대상으로 하고, 한국의 연구자들이 활동하는 한국적 연구생태계 안에 존재한다. 따라서 한국 인문학에서 어떤 연구가 갖는 가치는 그것이 한국의 연구생태계 안에서 위에서 언급한 인문학의 사회적 임무에 얼마나 충실하게 기여하는가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 연구의 '질'을 평가하는 어떤 보편적이고 절대적인 기준을 상정하고, 그것을 과학적으로 적용만 하면 된다는 식의 발상은 적어도 인문학의 경우에는 터무니없는 환상에 불과하다. 이런 맥락에서 보면, 인문학 평가에서 그 성과물을 되도록 영어로 써서 국제 학술지에 게재하도록 권장한다든지, 국제 학술지에 대한 평가조차도 A&HCI나 Scopus 같은 외국의 상업적 기관이 발행하는 학술지 목록을 무조건 신뢰하는 것은 인문학으로서는 용납하기 어려운 관료주의적 폭력이라고 할 수 있다.[28] 물론 인문학적 성과물이라고 해서 언제나 한국에 관한 것이어야 할 필요는 없지만, 적어도 그것을 교양의 일부로 받아들여 자아를 성장시키거나 축적된 학문적 유산으로 받아들여 자기 연구의 일부로 삼

28) 이런 맥락에서 최근 카탈루니아(Catalunya)의 인문사회 분야 학자들이 "연구성과의 평가에서 출판장소와 출판언어로 인해 선입견을 가져서는 안된다"고 선언한 것은 매우 뜻깊은 일이다. "Research Assessment in the Humanities and Social Sciences" (제11차 AQU Catalunya Workshop 자료집, 2010년 1월 28~29일). http://www.aqu.cat/doc/doc_86235770_1.pdf 7면. 국제 학술지의 출판장소와 출판언어는 각각 미국과 영국 등 영어권과 영어가 압도적인 것이 현실이고 인문학도 예외라고 볼 수는 없지만, 영어 학술지를 주로 등재하고 있는 Scopus에 기반을 둔 통계를 봐도, 유럽 주요국의 인문학의 경우는 2008~2012년 영어논문 비율이 프랑스 39.4%, 스페인 48.2%, 이딸리아 66%, 독일 66.9%에 그치고 있음은 우리가 주목해야 할 대목이다. *Research Trends* 32 (Mar. 2013) 21면 참조.

는 것은 영어권의 대중들이 아니라 한국의 대중들과 한국의 연구자들이라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한국의 인문학자들에게 무조건 '세계적인 수준'의 연구를 '짧은' 시간에 '많이' 낼 것을 요구할 것이 아니라, 한국 인문학의 존재의의에 비추어 그에 걸맞은 연구, 한국의 연구 생태계를 더 풍요롭고 활기차게 만들 연구를 요구해야 옳다. 이와 같은 근본적인 발상의 전환 없이는 기존의 제도를 아무리 적극적으로 개선해도 그것만으로는 한국 인문학의 지속가능성(sustainability)을 결코 확보할 수 없다.

Evaluation in the Humanities: A Humanist Perspective

PARK Chan Kil

The recent development in the university evaluation system in Korea has turned out to be extremely detrimental to academic research, particularly in the humanities. The corporatization of higher education in Korea imposes a problematic evaluation system on humanist scholars in that it places them under enormous pressure to publish at a rate incompatible with humanities scholarship. This paper critically examines the validity of the current university evaluation system in the humanities from a humanist scholar's viewpoint. By analyzing the official statistics on humanities scholarship of Korean universities between 2011-2012, this paper argues that present publication requirements for humanities professors go well beyond their natural research capacity. It is highly unlikely, however, to rectify such a problem without exempting humanities scholarship from the race of unlimited competition taking place in the global market of higher education represented by world university rankings. Research performance in the humanities should be assessed with a new evaluation system reflecting a good understanding of the nature of humanities scholarship such as distinctiveness, diversity, and locality.

Key Words: the humanities, university evaluation, research assessment, world university ranking

Submitted: Sep. 6, 2014
Reviews Completed: Oct. 1, 2014
Accepted: Oct. 7, 2014